

2021년 우리 군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국방정책 추진 방향 4가지를 공개했다. 2021년 국방부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1년 국방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문 대통령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 강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업무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美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면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과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을 통해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 들어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연 것과 관련,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달라”면서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형 기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

국방부, 2021년 국방 업무보고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국방정책 추진 방향 4가지를 공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갖고 국방정책 추진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7가지 핵심추진 과제를 밝혔다.

서 장관은 먼저 국방정책 추진 방향의 배경이 된 국방환경 평가를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주변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강한 힘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헌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미래 강군으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정책 추진방향의 실질적인 과제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서 장관은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 등 기존의 전통적 위협은 물론 최근 대두된 테러·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9·19 군사합의 가운데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을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가속화는 물론 한미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변화된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2050년의 국방 환경에 맞춰 비전을 제시할 ‘미래비전 2050’을 작성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비전 2050은 국방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다가올 2050년에는 우리가 첨단과학기술 위주의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과 범정부 대응 지원 계획도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곧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민·관·경과 협조해 완벽한 수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형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이 핵심추진 과제로 들어간 점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부적인 주제에 맞춰 한국판 뉴딜을 선제적으로 적용, 스마트하고 강한 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도 소개됐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으로 압축되는 병영문화 혁신의 추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군 의료 시스템,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과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 제대군인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올해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강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회복·포용·도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지킴이로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진** 맹수열 기자

4대 국방정책

- ① 강한 힘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
- ② 코로나 극복 일상 회복 위한 헌신
- ③ 한국판 뉴딜 적용 미래 강군 도약
- ④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 조성

국방업무 7대 핵심추진과제

-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②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
- ③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 ④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 ⑤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 ⑥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 ⑦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과 범정부 대응 지원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장병들이 2호선 강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종원 기자

전통·비전통적 안보위협 동시 대처 능력 강화

국방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국방부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전력화해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진은 공군 일선 부대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장면이다. 한재호 기자

1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21년 국방·외교·통일부 업무보고는 현재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외교·통일부 올해 추진 방향을 점검한 것은 그만큼 외교·안보 분야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런 정부의 방향에 맞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 하는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이 보고한 7대 핵심추진과제에는 이런 다짐이 자세히 녹아들어 있다. 가장 먼저 강조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은 전통·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한미 맞춤형 핵·미사일 억제 전략 및 공동 미사일 대응전략, 핵심 전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 과학화 경계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전력화해 경계태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 수행능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충실한 이행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 장관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

대행위 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호응하면 남북 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우리 지역 습지 생태조사와 DMZ 평화의 길 등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는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 당국 대화는 물론 협의의 대상 다변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제때 시행되도록 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은 4차 산업혁명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해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함,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8대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AI 등 각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방안 연구개발을 선도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넘어 2040년을 대비한 미래 군 구조 발전 구상과 30년 뒤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국방비전 2050’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과 범정부 대응 지원도 게을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민·관·군·경



강원도 인제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찾은 국민참여단원이 첨단 무기체계를 체험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이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과 대비태세를 강화해 국가 재난 수준의 보건 위협이 또다시 찾아와도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형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은 디지털·그린·안전망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친환경적인 군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교육 도입과 부대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분야는 병사는 물론 간부까지 모든 장병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병 봉급 인상과 피복·장구류 개선은 물론 자기개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금을 지난해 80억 원에서 올해 235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직업군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직업 안정성 보장, 제대군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해 직업 안정성 보장과 군 숙련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맹수열 기자



육군보병학교 드론교육센터 교관들이 드론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